

전주매일

금연상담전화 | 1833-9030
전라북도 익산시 무왕로 895(신동동 344-2) 한광대학교병원 5층 1호
TEL: 063-859-2400 ~ 2410 FAX: 063-859-2414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박경문 ☎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2019년 8월 19일 월요일 (음 7월 19일) 제2355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 (063)288-9700

REPORT - 롯데는 왜 불매운동의 대상이 되었나?

일본 자본에 의한 지배구조가 원인

일본의 수출규제, 한국의 화이트리스트 제외로 불붙은 한·일 무역전쟁이 롯데 불매운동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내 10대그룹 안에 드는 기업으로, 작년 매출만 100조원에 이르는 롯데를 국민들이 불매운동 대상으로 보는 이유가 무엇일까?

국민들이 롯데 불매운동을 벌이는 이유는 △일본자본에 의한 지배구조, △일본 전범기업 및 우익기업들과 합자회사 설립, △롯데 제품이 일본제품이라는 해외 광고, △롯데가(家) 사람들의 국적과 한국어 능력 등이다.



전주시내 한 대형마트 수입맥주 진열대의 대부분이 독일 등 유럽산으로 채워져 있고 아사히 등 일본맥주는 찾는 이가 없어 재고만 한쪽으로 치워져 있다.

▲지배구조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롯데의 지주회사 자본의 대부분이 일본 소유이기 때문이다. 롯데쇼핑, 롯데칠성음료, 롯데푸드, 롯데제과, 롯데건설, 롯데물산, 롯데캐피탈 등 수많은 계열사들의 최대주주인 호텔 롯데 지분의 99.28%가 일본 소유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한국에서의 매출규모가 일본롯데의 20배에 달하는데 “수익금 대부분을 일본으로 가져가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을 갖는다.

▲일본전범기업·우익기업들 등 일본기업과 합자회사를 설립해 한국시장 점령

일본의 우리나라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 화이트국가 지정제외는 2018년에 있었던 전범기업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이다. 그런데, 롯데그룹은 일본의 전범기업 또는 우익 기업들과 동업해 일본기업의 한국진출의 교두보 역할을 해왔다.

‘롯데 케미칼’은 전범기업인 미쓰비시와 함께 50대 50의 지분으로 2006년 롯데MCC를 설립했다. 미쓰비시는 이만 한·일 경제전쟁을 야기한 한국 대법원이 강제징용자에게

전범·우익기업들과 합자회사 설립 등 꼽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린 전범기업이다. 또한 롯데케미칼은 미쓰비시와 함께 역시 50%씩 투자해 롯데미쓰비시화학이라는 합자사를 설립했다. 미쓰비시화학 역시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 사람들을 미쓰비시 광산에 강제 동원한 전범기업이다. 이 외에 롯데케미칼은 우베흥산이라는 일본 기업과도 합자해 롯데-우베 인조고무라는 회사를 설립했다. 이 회사의 롯데케미칼 지분은 40%다. 우베흥산 역시 일제강점기에 조선인을 강제 동원해 노동력을 착취했던 전범기업이다.

‘롯데쇼핑’은 일본 패스트리태일링이라는 회사와 49% 대 51%의 지

분으로 유니클로 제품을 유통하는 FRL코리아를 공동운영 중이다. 유니클로 이사는 “한국의 불매운동은 오래가지 못할 것”이라며 우리 소비자를 압박해보는 표현을 해 불매기업 1순위에 올라 있다.

이 밖에 ‘롯데칠성음료’는 아사히 그룹홀딩스와 50%씩 투자해 일본 아사히맥주를 수입판매하는 롯데아사히주류를 설립했고, ‘롯데상사’는 일본양곡계회과 60대 40의 지분으로 무인양품 합자회사인 무인코리아를 설립해 운영중이다.

지금은 롯데 계열사는 아니지만, 신격호 전 총괄회장의 셋째 남동생인 신춘호 회장이 설립한 농심도 일본 전범기업 아지노모토(味の素)와 합자법인을 설립했다는 과거보도가 있었다.

▲롯데가 일본제품이라는 해외광고와 욕일기 사용

고와 욕일기 사용

롯데 베트남 홈페이지의 겸 광고에는 ‘일본은 남비원이라는 문구가 올라와 있고, 인도네시아에서 판매되는 롯데 자일리를 겸에는 JAPAN BRAND(일본 브랜드)’라고 적혀있다. 또한 롯데는 태국의 겸 광고에 전범기업인 욕일기를 사용해 논란이 된 적이 있다. 세기의 대결이라고도 불려 전세계의 이목이 집중됐었던 2011 세계피겨스케이팅 대회에서는, 김연아의 라이벌이었던 아사다마오를 후원하고 롯데 가나 초콜렛 광고에도 그녀를 출연시켰다. 이쯤 되면 매출의 95%가 한국에서 발생하고, 직원 13만 명이 한국인이므로 롯데는 한국기업이라는 해명이 공백해진다.

▲롯데가 사람들의 국적과 한국어 능력

롯데의 불매운동에는 롯데가(家) 사람들의 국적과 태도에 대한 국민적 감정도 섞여 있다.

롯데가(家)의 구성원 대부분은 일본국적 또는 일본인이기 때문이다. 알려진 바로는 신동빈 회장과 신동주는 한국국적이다. 하지만 이들은 병역을 면제 받고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신회장의 어머니도, 아내도, 자녀도, 자녀의 배우자도 일본인이다. 또한 롯데가 사람들은 일본어에 능숙하지만 한국어는 거의 하지 못한다. 신동주는 한국어를 거의 못하고 신동빈 회장도 한국어가 어눌하다. 따라서 국민들 눈에는 롯데가 일본인이 경영하는 일본기업으로 비치진다.

일본 제품 불매 운동이 이어지면서 최근 한 달간 일본 유명 브랜드 제품의 국내 소비가 절반 이상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롯데그룹 상장계열사의 시가총액이 올해 들어 7조5000억원이나 줄어든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오너 일가 및 주주 구성에서 일본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는 롯데. 지금의 위기는 겨우 시작일 뿐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윤상 기자

정부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발맞춰

전북서도 정착·확산 ‘올인’

도, 기관장 책임 강화 등 4대 분야 본격 추진

적극행정 공무원 특별승진 등 파격 인사 우대

우수공무원 선정 등 위한 ‘지원 위원회’ 설치

전북도는(도지사 송하진) 정부의 적극행정 추진방향에 맞추어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근절하는 2019 적극행정 실행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적극행정 실행계획은 도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 조성을 위한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 등 4대 분야와 이를 실현하기 위한 기관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 등 7대 핵심과제로 추진하게 된다.

정부는 지난 3월 ‘적극행정 추진방안’을 확정된 데 이어 최근 최근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을 시행(대통령령 8월 6일 제정)하는 등 적극행정 정착·확산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 바 있으며, 전라북도에서도 실행계획과 함께 관련 조례 제정을 통해 적극행정이 공직문화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먼저 전북도는 기관장 책임 및 역할강화와 관련, 적극행정에 대한 기관장의 관심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행정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할 전담부서 및 책임관으로 대도약기확단을 지정해 매년 적극행정 실행계획 수립과 분기별 이행실적을 점검·관리하며 하급자의 정책결정 부담완화를 위해 현행 위임결정규정을 개정하고,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적극행정 지원위원회를 설치하여 적극행정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할 계획이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업무를 적극적으로 처리한 공무원의 책임을 면제하고 법률적 지원과 적절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해 적극행정 공무원에 대한 법률적 지원(소송대리인 선임 및 비용지원), 사전컨설팅 감사 신청대상 확대(가관-민원인), 적극행정 면책요건 완화 및 신청기간 확대(30일→처분지시 전)하고, 반기별로 우수공무원을 자체 선발하고 성과의 타월성 정도에 따라 자체기준을 마련해 적절한 인센

티브를 부여한다.

도민과 기업활동에 불편을 주거나 권익을 침해하고 예산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소극행정의 업무를 혁파하기 위해 특별점검반을 구성하여 소극행정 행태·부조리 사례에 대해 집중 단속해 비위 정도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국민신문고 ‘소극행정 신고’ 처리 전담반을 구성·운영해 신속하게 처리하며, 오프라인 신고센터(감사관, 민원실)를 설치하는 등 다양한 창구를 마련하여 소극행정 혁파에 나설 계획이다.

현장과 소통하는 적극행정 공직문화 확산을 위해 대내적으로는 행정포털 적극행정 게시판을 개설하여 제도안 내, 우수사례 등의 자료 공유로 적극행정 분위기를 조성하고, 적극행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공감대를 형성하고자 사례·현장중심의 전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대외적으로는 도 홈페이지와 정책소통 플랫폼 ‘전북 소통대로’에 적극행정 코너를 개설하여 도민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우수공무원도 추천 받을 계획이다.

송하진 도지사는 “적극행정에 대한 관심을 다짐하면서 간부회의를 통하여 적극행정의 정착·확산과 소극행정 예방·근절을 위해서는 제도적 기반과 함께 ‘나부터 변화했다’는 공직자들의 인식과 행동의 변화가 더 중요하다”며 “적극행정 실행계획의 철저한 이행과 부서 특성에 맞는 ‘1부서(課) 1개 사례 발굴·공유’ 등으로 적극행정이 공직사회에 빠르게 확산되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앞으로, 전북도는 적극행정 개념이 도민 및 공무원에게 생소한 만큼 관련 내용을 꾸준히 홍보하고 적극적인 업무추진을 독려해, 관행과 규정의 틀에 얽매인 수동적 업무행태를 개선하여 도민들의 적극행정 체감도를 높여나갈 계획이다. /김진성 기자

매일 INDEX 4면 · 전통시장에 활기 UP ... 모래내시장 치맥가맥 페스티벌 성료

JJC 지방자치 TV

지역 문화 콘텐츠

JJC전북

YouTube KakaoTV NAVER TV DUM NAVER 전북뉴스

지방자치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합니다!

TV방송채널 kt 올레TV ch.224 Btv ch.285 tv ch.253

JJC본사: http://www.jjctv.co.kr Tel 02-2057-0011 Fax 02-2057-0021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09 롯데캐슬프리저던트 23F
 JJC전북총국: http://jjctv063.co.kr Tel 063-246-0885 Fax 063-286-0887 전주시 완산구 기린대로 222 승주빌딩 5층